

야권, 22대 1호 법안 '특검법' 공조 '대여 공세'

민주 '채상병' 혁신당 '한동훈' 발의 폐기 특검법 보다 수사 범위 확대 민주 "법사위원장 반드시 가져와야" 국힘 "재의 요구할 수 밖에 없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각각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특검법 공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 전보다 내용이 한층 보강됐다.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를 명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자신과 주변인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 상 권한을 계속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민심을 나침판 삼아 전진하는 국회의 성과로 평가 받는다"고 강조했다.

6월 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차지할 경우 특검을 위한 법사위 관문 통과는 어렵게 되고, 본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하는 우회로를 또 거쳐야 한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원구성을 신속

히 추진해 특검법과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각종 민생법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6월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7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4·10총선 공약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우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의혹을 정조준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관 재직 시 비위 의혹·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

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다.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후보자가 특검 후보 대상이다. 국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 대화와 협의의 정신에 어긋난 법안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재의를 요구해왔고 앞으로도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ilbo.com

광주·전남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잠정 확정

민형배, 문체위... 지역현안 고려

제22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가 30일 잠정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간사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배정안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는 박지원·박균택 의원이 들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는 안도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조인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는 양부남 의원이 배치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민형배·

조계원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는 주철현·문금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에는 김원이·권향엽·정진욱 의원이 들어갔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위 간사를 맡게됐다.

상임위 간사는 심사 대상에 오를 법안

을 가리거나 여야 협상을 통해 일정을 결정하는 등 막중한 권한을 갖는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진숙 의원,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4선인 이개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정준호 의원이 배치됐다.

정진숙 의원은 겸임 상임위원 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갔다.

서삼석, 신정훈 의원 등 민주당 3선 의원 31명은 상임위원장 선임 대상이어서 이번 배정에서 제외됐다.

상임위원장은 당은 물론 국민의힘과도 조율해야 한다.

서 의원은 농해수위원장, 신 의원은 산업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의 상임위 몫이 결정되면 위원장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안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상임위 배정 문제를 조율한 뒤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최종 확정지를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올리는
으랏차차 패키지

KT 으랏차차 패키지는 매장 운영에 필요한 통신, 주문, 서빙, 고객응대, 홍보, 보안 등 필요한 것만 골라 할인까지 받는 **소상공인 맞춤형 결합 서비스**입니다

*패키지 구성 시 KT 인터넷 상품 포함 필수 (단, 일부 패키지는 예외)
*구성 상품, 결합 조건, 약정 기간, 할인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kt.com 참조